

# “GM, R&D법인 분리는 정상화 위반… 군산공장 재활용을”

## 산업부

수도권에 공공기관 45%… 10년간 이전 중단 전체기업의 86% 수도권에 몰려 “점검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지엠(GM) 군산공장의 폐쇄 후속 대책에 집중 질의했다. 또한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몰아붙였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10일 “한국GM이 일방적으로 R&D 법인 분리를 추진 중인데 이는 지난 5월 정부와 GM이 체결한 정상화 방안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 공적자금이 8000억원이나 투입됐는데 카허 카젬 사장이 국회에 나와 군산공장 재활용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도 “GM이 지난 6월 30일 군산공장을 폐쇄한다고 해놓고 이후 33명의 근로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 발견됐다”며 “GM이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군산공장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고 부당 해고 의혹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현행 법률로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가능한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간 사실상 중단됐다”며 “아직도 전국 361개 공공기관 가운데 45%에 달하는 162개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도 “전국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기업의 86%가 몰려있고,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가 전체의 12%에 불과한데도 매출은 50%를 차지하고 있는 기형적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주장했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이 정부의 제1과제가 일자리 창출 아니냐”며 “일자리 창출에 맞게 경제 정책을 수정해야 하는데 80년대식 교조적 이념만 가지고 재벌 때려잡는다고 몽둥이질만 하다가 서민은 다 죽고 일자리만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기업의 선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기업 협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협력법)의 연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한시법인 기업협력법에 대한 보완책이 있느냐는 정우택 한국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2016년 시행된 기업협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돋는 법이다.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패키지로 여러 정책 지원을 해줘 이른바 ‘원샷법’이라고도 불린다.

정 의원은 국감에서 올해 들어 기업협력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이유를 물으며 기한 연장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 장관은 기업협력법은 기업의 참여한 필요 한 법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우리도 연장을 논의할 계획이 있다”며 기업협력법 연장을 시사했다.

아울러 기업협력법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법 시행을 활성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 골목상권 위협, 甲질 논란 등으로 국회 불려간 CEO

### 식품·프랜차이즈 대표 증인석으로

담칠곤 오리온 회장, 인사불이익 등 노조탄압 이석구 스타벅스 대표, 골목상권 위협 저작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간접광고 논란 등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 식품·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들이 잇따라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국회를 찾게 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는 오리온,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풀무원 푸드마스, MP그룹, bhc 치킨, 더본코리아 등이 감사 대상으로 올랐다. 이들 업체는 갑질이나 소상공인·골목상권 문제, 식중독 사건과 관련한 업체들이다.

오는 12일 담칠곤 오리온 회장, 이석구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대표, 정우현 MP그룹 전 회장,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등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담칠곤 회장은 노조탈퇴 강요를 비롯해 인사 불이익, 영업사원 상대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를 탄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석구 대표는 골목상권 침해와 소상공인 보호 등의 관련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전국 약 1200개 매장을 모두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



국정감사가 시작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가 관계공무원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어, 가맹사업법을 피해가는 행태로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갑질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정우현 전 회장도 증인으로 참석한다. 정 전 회장은 경비원 폭행과 친인척 명의 납품업체를 통한 치즈 통행세, 보복 출점, 일가족에 유령급여 지급 등 갑질 경영 재판에 넘겨졌으며, 올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한신포차·빼다방·홍콩반점 등 20여개 브랜드를 운영 중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참고인으로 참석한다. 백 대표는 호텔업, 술집 등 무분별한 업종 확장과 방송출연을 통한 간접광고 논란이 주요 논의거리가 될 전망이다. 또한 현 정부의 골목상권 및 자영업

자에 대해서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5일에는 박현종 bhc 회장과 정종한 샘표식품 총괄본부장이 출석한다.

박 회장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맹점주들에 대한 갑질 논란과 관련해 답변할 예정이다. 지난 8월 1100여명의 bhc 가맹점주로 구성된 전국 bhc 가맹점협의회는 광고비 횡령과 해바라기유 공급가 일부 편취 혐의로 bhc 본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정 총괄본부장은 샘표식품의 대리점에 대한 사업 활동 방해와 거래조건 차별 등에 대해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7조 덜 받아 정부, 10년간 편법 산정방식 사용

### 보건복지부

정부가 법적으로 건강보험에 줘야 할 국고지원금을 지난 10년간 7조원 가량 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및 미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2017년 10년간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부족분은 총 7조13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지원금은 2008년 4592억원, 2009년 127억원, 2010년 1117억원, 2011년 5196억원, 2012년 6761억원, 2013년 5950억원, 2014년 5101억원, 2015년 6785억원, 2016년 1조4514억원, 2017년 2조1186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지원규정을 지킨 적이 없다.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산정하는 편법을 썼다.

/이세경 기자 seelie@

## 이개호 “쌀 목표가격 산정때 물가상승률 반영”

### 농식품부

농업인 소득안정, 직불제 개편 추진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쌀 목표가격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차기 쌀 목표가격 동의요청서를 11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현재 법률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현행 법률에 따라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처리가 늦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그는 또 “쌀 목표가격 변경과 병행해 농업인 소득 안정을 강화하고, 국민이 기대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현황과 관련

해 “지난해 기금 조성액은 309억6000만원으로 목표액인 1000억원에 미달했고, 올해도 10월 현재까지 166억5000만원이 출연돼 여전히 부진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상생기금에 출연하는 민간기업에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동반성장위원회와 협의하는 등 기금 조성액 목표 달성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지자체별로 접수된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최대 1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필요 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가축질병 방역 강화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설정해 비상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있다”며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에 대응해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의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 “택지개발 정보 또 다른 유출자 없는지 수사해야”

### 국토부

신창현 의원 증인채택 두고 여야 신경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 첫날엔 ‘택지개발 계획 사전유출’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수도권 공공 택지 정보 유출을 두고 공세를 벌인 가운데, 신 의원 등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이날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심재철 의원은 정부의 업무추진비 자료를 공개했고 신창현 의원은 정부의 공공택지 후보지 정보를 유출했는데, 이를 다루는 정부의 태도가 공정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김 장관이 입장 표명을 유보하자 송 의원은 “개발 정보 불법 유출과 정부 부처 업무추진비 자료 공개 중 어떤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느냐”고 물고는 “신 의원 건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4주가 걸렸는데 심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나흘 만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은 “여권 등 정치권과 경기도 등의 유력자들도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또 다른 유출자가 없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도 “국토부는 신 의원 정보를 유출한 다음 날 자료를 내고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했는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책적인 자료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이 대표의 발언은 국민을 우롱하는 대단히 오만한 말”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날 오전 여야 의원들은 신 의원과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증인채택이 불발된 데 대해 책임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현재 의원은 “김 시장은 국회에서 부르면 오겠다고 했는데 왜 증인채택이 되지 않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현행 국감 관련 법률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가 규정돼 있다”며 “야당이 신 의원 등을 고발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불러서 물어봤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체신화 기자 csh9101@